

| 사회적 대화 논단 |

# 4차 산업혁명, 노동 4.0 그리고 사회적 대화

**이창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원장 겸 논설위원

- 현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 전 한겨레신문 편집국 사회에디터석 선임기자
- 전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객원교수
- 전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소장
- 전 나눔과 미래 이사
- 전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 문제제기: 핵심 질문과 초점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화는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꾸어 낼까?

공장과 생산방식, 일자리와 노사관계, 교육시스템, 그리고 도시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가 전개될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그 변화가 유익할까? 그렇지 못할까? 바람직할까? 그렇지 않을까? 비관론과 낙관론이 공존한다. 분명한 건 그런 기술변화가 궁극에는 인간의 삶을 더 안전하게 하고 삶의 질을 더욱 높이도록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 사회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각계에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논의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핵심 사항은 최종적으로 이 질문과 맞닿아야 할 것이다.

지난 2016년 1월 클라우드 슈밥이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처음 언급한 이래 한국 사회처럼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유행어가 된 나라가 있을까 싶다. 관련 서적 출간이 봇물을 이뤘고, 하루가 멀다고 언론보도와 콘퍼런스가 쏟아졌다. 기업과 정부, 정치권은 물론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각종 교육기관 등에서도 해당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 왔다. 그 열기가 지나치리만큼 뜨거워 우려마저 나올 정도다. 경제부처 장관을 지낸 한 원로 학자는 “과열 양상을 보여 저항감과 의구심도 들었지만, 아무리 들여다봐도 우리 사회가 주시해야 하는 중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말했다. 거품이 있긴 해도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큰 도전이며, 그 도전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초점은 무엇을 어떻게 논의하는가, 즉 논의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관점과 방향이다. 이 점에선 분명 몇 가지 우려가 있다. 우려는 4차 산업혁명을 경제성장의 시각에서만 보는 사고다. 4차 산업혁명을 불러일으키는 디지털 기술의 다양한 융합과 연결은 산업현장에서는 이미 시작됐다. 고도의 융합적 기술진보는 다양한 변화를 낳을 것이며, 그 적용범위나 속도 또한 확대될 것이다. 그런 확산이 실물경제와 산업 발전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정부와 업계가 기대하는 대목이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보면, 이런 기대가 잘 드러난다. 이 보고서에서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은 지능화 혁명을 기반으로 경제사회 구조적 과제의 동시 해결이 가능한 혁신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이라며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명시했다.

아직 학술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개념이지만 정부 보고서에서 정의하듯 이 혁명은 초연결과 초지능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기술혁명이다. 초지능은 사람과 사물,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상황을 일컬으며, 이장원(2017)에 따르면, 초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훨씬 초월한 지능을 가리킨다. 증기기관에 따른 기계화(1차 산업혁명)에서 전기를 통한 2차 산업화에 이어 컴퓨터와 인터넷에 따른 3차 정보화 혁명을 거쳐 나타나는 새로운 기술패러다임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각이다. 이는 기존에 불가능했던 복잡한 작업을 자동화해 산업현장에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인공지능 기계를 활용해 노동의 생산성 또한 획기적으로 높인다. 나아가 축적한 대규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각종 시스템의 효율화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반을 둔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성장 패러다임 전환의 새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며, 대통령 직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란 컨트롤타워를 만들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 정부에 대한 논의와 시각이 여기서 그쳐선 곤란하다. 역사의 진보를 말할 때 기술발전만큼 명징한 증거는 없지만 우리는 동시에 기술진보가 가져온 어두운 부작용을 수없이 겪었다.

기술은 경제적 부를 가져다 준 반면 환경파괴와 대량살상의 위험을 가중했고, 인간소외를 더 심화시켰다. 지난해 11월 열린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주최한 제8회 아시아미래포럼에 참여해 발표한 리처드 프리먼 하버드대 교수는 로봇 시대 봉건제(robot-age feudalism)의 위험을 경고했다. 기술발전의 성과가 로봇이나 인공지능 같은 고도화된 자본을 소유한 이들에게 집중된다면 로봇 소유자는 번창하지만 그렇지 못한 대다수는 힘겹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기술발전은 생산력과 경제적 부만이 아닌 부작용도 불러오기에 결국 사람이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기술발전은 이를 위해 힘써온 노동자들을 배제하거나 노동을 소외시키는 형태로 이뤄져서도 안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 4차 산업혁명, 좋은 노동 그리고 사회적 대화

노동을 배제한 4차 산업혁명 논의를 경계하는 까닭은 자명하다. 이 논의가 자칫 경쟁력 위주의 신자유주의적 성장론 관점이나 기술결정론적 사고에 이끌리기 십상이란 점 때문이다. 기술은 사회발전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4차 산업혁명이 무릇 장시간 노동을 가중하거나 소득 양극화를 가져오거나 노동자의 지위를 더욱 불안정하게 하는 방향으로 치달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현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대해선 유감이 많다. 우선 구성이 문제다. 20명의 민간위원과 5명의 정부 위원을 볼 때, 4차 산업혁명이 삶의 질 측면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구성이냐는 면에서 의문이 적잖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 논의에서 사회안전망은 중요한 의제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대변할 이가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 위원에 그나마 노동부 장관이 포함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위원회의 성격상 장관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참석할지 미지

수고, 복지와 여성 쪽을 대변할 책임자는 숫제 없다. 민간위원 구성도 보면 대부분 스타트업이나 아이티 전문가, 경영학 교수 등 일색이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깊게 들여다볼만한 복지와 노동전문가도 없다.

실상 4차 산업혁명은 노동과 복지의 관점에서 큰 도전을 불러오는 요인이다. 기존 한국 복지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더 드러낼 수 있으며, 한편에서는 한국복지체제의 전면적 재설계를 강요하는 요인이다. 복지체제의 패러다임 변동을 강제하는 거대한 해일일 가능성이 크다. 많은 기술발전이 그랬듯이 4차 산업혁명은 플랫폼노동 등에서 보듯 노동의 불안정을 가중할 심대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노동복지의 관점이 필수적이란 얘기다. 이런 관점에서 특히 눈여겨 봐야할 대목은 세 가지다. 첫째는 일자리의 양의 문제다. 늘 것인가, 줄어들 것인가로 4차 산업혁명이 고용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이는 노동시간과 연관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기도 하다. 두 번째는 일의 성격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이고, 셋째는 고용 양태의 변화다. 한마디로 고용량의 증감과 함께 좋은 노동에 대한 논의를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리처드 프리먼 하버드대 교수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제8회 아시아미래포럼에 참석해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이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이런 맥락에서 여러 시사점을 준다. 4차 산업혁명 담론의 뿌리인 독일은 정작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별로 쓰지 않는다. 대신 인더스트리 4.0, 즉 산업 4.0이란 말을 사용한다.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장(2017)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제조업 중심의 개념인데 반해 다보스포럼의 4차 산업혁명은 훨씬 포괄적 개념”이라고 구분 짓는다. 독일이 이를 추진한 배경은 2008년 세계 경제위기를 맞아 실물경제의 중요성이 대두하면서 제조업의 중요성을 자각해 이를 활성화하려는 의도였다고 한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가 산업 4.0인 것이다. 독일은 산업4.0을 통해 시장의 변화와 소비자의 요구에 조응하는 개인화된 맞춤형 생산을 꾀하는 전략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시사하는 바는 산업 4.0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속노조 등 노동조합이 적극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을 형성해 노동 4.0 녹서와 백서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노동

4.0은 노동 의제를 적극적으로 집중적으로 다룰 필요성을 깨닫고 특히 디지털 시대에 양질의 노동을 만들기 위한 노사정, 학계 및 시민이 참여한 사회적 대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독일 현지에서 만난 독일 연방 노동사회부의 클레르 국장은 필자에게 “노동 4.0은 2012년 산업 4.0이 나온 뒤 (논의과정에) 노동문제가 배제됐다는 자각에서 출발해, 디지털 사회에서 노동문제를 어떻게 사회적 대화에 포함할 것인가란 문제의식에서 비롯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과 독일의 산업 4.0의 전개과정에서 결정적 차이는 여기에 있다. 사회적 대화가 있느냐, 없느냐다. 이문호 소장은 “독일에서는 기업과 주요 연구소들 및 노조의 참여가 적극 이루어져 산업 4.0이 사회적 공동프로젝트로 발전한 반면, 한국에서는 정부의 프로젝트로 과정이 불투명하고 노조 배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산업 4.0과 노동 4.0 모두 정부가 주도했지만, 노조는 노동 4.0에서만 아니라 산업 4.0 추진과정에서부터 사회적 대화에 적극 나섰다. 베를린에서 만난 독일노총, 금속노조, 서비스노조(베르디) 소속 노조 간부들은 “노조가 참여하지 않으면 기술이 자본(기업)의 이윤창출의 도구로만 사용돼 노동자에게 큰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기술혁신이 노동의 인간화와 결합하도록 하기 위해선 노조의 참여는 필연적인 일이라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독일 노조들은 자문위원회를 꾸리거나 노조 내에 조직을 만들어 디지털화에 따른 노조의 대응전략을 모색하기도 했다.

독일의 노동 4.0은 정부와 노조, 경영계 모두에게 시사점을 준다. 비록 노동시장은 물론 노사 간 의사결정 방식 및 구조와 사회적 대화의 수준과 관행 등에서 독일과 우리가 많이 달라도 분명한 건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 없이 4차 산업혁명이 어느 일방에 의해 추진되어선 안 된다는 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현 4차 산업혁명 논의에서 노조와의 적극적 동반 관계를 획기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또한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인간화와 좋은 노동의 방향으로 가도록 보다 전략적 접근과 유연성 있는 사회적 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경영계 또한 보다 열린 마음으로 규제 완화나 경쟁력만이 아닌 사회적 가치에 입각해 기술발전을 바라보는 시각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포용적 한국형 노동 4.0을 기대하며

사회적 대화는 노사정 3주체 또는 노사가 사회경제적 이슈 등을 놓고 교섭, 자문, 협의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주의 또는 합의주의 노동정치의 방식이다. 우리 사회는 이 경험이 여전히 일천하고 성공사례는 실상 거의 없다. 사회적 대화를 원활히 할 수 있는 토대가 부족한 점도 있지만, '흑역사'와 그것이 끼친 '트라우마'도 큰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대화기구가 오롯이 그 역할로 기능한 적이 있었던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꾀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노동자들의 저항과 갈등을 흡수하기 위한 완충지대로써 활용됐을 뿐이라는 노동계의 시각을 부정할 수 있는가? 자본 편향적 정부 결정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악용했다는 평가에서는 또 자유로운가? 합의를 했더라도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 배제적으로 실행됐다는 비판에 반박할 수 있는가?

사회적 대화기구에 대한 노동조합의 불신은 이런 질문과 의구심에 기인한다. 사회적 대화를 이야기할 때 신뢰가 강조되는 배경엔 이런 과거가 있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참여와 탈퇴를 거듭했고, 민주노총은 1998년 이래 오랫동안 거부해오다 이제야 조심스레 손을 내미는 모습이다.

저성과와 양극화 등 한국 사회가 처하고 있는 현실과 4차 산업혁명 등 다가올 여러 사회경제적 도전은 사회적 대화 없이 헤쳐 나가기란 실상 어렵다. 다행스런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그 물꼬를 텃다는 점이다. 지난해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사정공동선언을 추진했던 것도 우리 사회의 사회적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한 발짝 한 발짝 대화의 문이 열리고 있다. 모처럼 열린 문을 되닫게 할 지위는 여전히 산재하지만, 그래서 낙관도 비관도 선불리 할 수 없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 조금씩 이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지난 4월 3일 열린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란 새 사회적 대화 기구의 명칭을 합의했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 및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이 기구에 참

여하는 것으로 의견 접근도 보였다. 의제별, 산업별(업종별), 지역별 대화 체제를 강화하고 이른 시일 안에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데도 동의를 이뤄졌다. 의제별 위원회에서는 특히 경제의 디지털화(4차 산업혁명)와 노동의 미래위원회,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위원회,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 등 3개를 우선적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각종 노동현안과 정치적 상황이란 지뢰가 여전하지만 사회적 대화는 한 발짝 진전되고 있으며, 그래야 한다. 사회적 대화가 만병통치약은 분명 아니지만, 적어도 오늘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할 게 아니다. 사회적 대화 없이는 한국 노사정이 함께 직면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풀 수 없으며, 우리 사회의 슬한 난제 해결도 마찬가지다. 느리더라도 이런 대화를 통해 풀어갈 때 문제 해결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노사정 모두의 포용적 태도를 갖고 어떤 경우여라도 대화의 끈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이어간다는 것일 게다.

[ 참고문헌 ]

- 박명준(2018), 「한국형 노동 4.0의 필요성과 과제」 노동포용적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의 필요성과 과제 토론회 발제문  
이장원, 김기정(2017), 「4차 산업혁명의 노사관계 차원 과제와 대응전략」 한국노동연구원  
이문호(2017), 「독일의 노동 4.0 배경 및 전개과정」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이창곤(2017), 4차 산업혁명 논의, 노동 배제적으로 흐르지 않아야, 〈한국노동〉 vol.537, 12월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제8회 아시아미래포럼 「일의 미래: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향하여」 자료집